

신중 vs 반대...2野 공동전선 ‘균열’

더민주	국민의당
“국민투표 할 사안 아냐” 12일 의원간담회서 조율	“더민주, 사실상 용인한 것” ‘국민투표’ 검토 의견 조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미국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놓고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야권공조 시스템에 균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드 배치 발표 후 국민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데 반해 더민주가 애매한 태도를 보였고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투표 필요성을 언급하자 더민주가 그럴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더민주의 태도가 ‘오락가락’ 한다면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다만, 양당이 정확하지 않은 당내 입장을 정리하려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입장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에 대한 더민주의 태도가 애매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비대위 회의에서 “제가 크게 염려하는 것은 더민주의 지도부에서 사드 배치를 사실상 용인하는 그런 정책성의 문제”라면서 “더민주가 반대 입장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금까지 함께 공조를 해오던 더민주가 저렇게 되니 굉장히 당혹스럽다”면서 “당론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민주의 여전히 ‘신중론’에 방점을 두면서 국민의당에서 나온 ‘국민투표’ 주장을 일축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회의에서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의 컨센서스를 위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더 밀접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자들과 만나 안 전 대표의 국민투표 검토 의견에 대해 “국민투표를 할 대상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국민투표는) 너무 나간 제안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조 기초를 유지하고 있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각자의 의견을 정리하고 좀 더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상황을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민주의 경우 중국과의 외교마찰과 국론분열 등 사드배치로 인해 잃은 것이 너무 많다는 부분에 방점을 옮기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고, 국민의당 역시 안 전 대표의 ‘국민투표’ 발언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더민주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가 사드 배치에 완강한 거부 반응을 표하고 있고, 심화할 경우 중국으로부터 경제제재가 발동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드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도, 김 대표는 원칙적으로 비준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가운데 당 내부 회의를 통해 분담금이 늘거나 미군기지가 아닌 곳에 배치하게 된다면 비준을 검토키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더민주는 12일 비공개 의원간담회에서 사드와 관련된 의견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에서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나서 국민투표 검토 의견에 대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학자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있다”면서 “(일각에서) 국민투표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혹은 내일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졌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사드 NO” 11일 충북 음성군 설성공원에서 열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범국민 결의대회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고향에 사드 NO’라는 구호가 적힌 대형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 투표 제안 ‘갑론을박’

새누리·더민주, 부정적...득실 놓고도 관측 엇갈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한 찬반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제시한 국민투표 카드가 주목을 끌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사드에 대한 국회 비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

할 국가적 의제”라며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응은 시원치 않다. 사드 배치에 찬성 입장인 새누리당은 물론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우리의 안보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투표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기를 박았고,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도 “국민투표 대상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국민의당 차원에서 국민투표 문제를 놓고는 매끄럽게 일사불란한 당론으로 수렴되지는 않은 모양새이다.

안 전 대표의 국민투표 카드에 대한 득실을 놓고는 관측이 엇갈린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와 같이 ‘또 하나의 포퓰

리즘’이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이 있는 반면 사드 문제로 국론분열까지 치닫는 상황에서 단순한 반대를 넘어 ‘출구’를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안 전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국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투표가 국회비준보다 한발 나아간 것이지만 국민의당으로서 오히려 정부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줬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도 국민투표를 지렛대로 외교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출구 전략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경북 성주·경남 양산 유력” 추측 난무

정부 결정 후 쉬쉬...혼란 가중 다.

사드(THAAD)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와 경남 양산 등이 추가로 거론되는 등 배치 지역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국방부와 정부는 배치 장소를 이미 결정해놓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공개하지 않아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미가 지난 8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방침을 발표하면서 배치 지역을 공개하지 않은 이후 배치장소를 둘러싸고 온갖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는 등 온 나라가 야단법석이다.

그간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 평택·오산, 경북 철곡, 전북 군산 등이 후보지로 꼽히더니 최근에는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제3의 장소’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

다. 군의 한 소식통은 11일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지대에 있는 우리 군의 레이더기지나 방공기지에 사드를 배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레이더기지나 방공기지는 고지대에 있어 사드 전자파 유해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경북 성주와 경남 양산 등의 옛 방공기지는 나이크 허큘리스 미사일이 퇴역한 이후 현재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부지 규모 등도 사드를 배치하기에 부족하지 않아 유력하다는 분석이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하지만, 양산 등은 너무 후방에 있어 경기도 평택의 미군기지도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도 거론된다.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철곡 인근 성주에 있는 우리 공군의 방공기지가 유력하다는 말도 나온다. /연합뉴스

구체적 운영절차 수립 착수...내년 배치

주민 반발 해소 속제

주한미군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된 한미 양국은 앞으로 사드 운영절차를 정교화해 구체적인 운영절차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을 공식화했으며 수주 내로 사드 배치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측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사드를 국내에 실전 배치하고 운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사드배치 지역 발표 시점은 사드배치 문제를 협의해온 한미 공동실무단이 운영

결과 보고서를 완성하고 양국 국방부 장관이 이를 승인한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공동실무단 보고서에는 사드배치 일정과 장소, 한미 양국 국내법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안전, 환경, 비용 문제 처리 방안 등이 담겼다.

한미 국방부 장관의 공동실무단 보고서 승인 이후 양국 군은 사드가 배치될 지역의 지형 조건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드 운영절차를 만드는 데 착수하게 된다.

사드가 배치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원만하게 해소하는 것도 한미 양국이 앞으로 떠안아야 할 중요한 숙제다. /연합뉴스

北 “배치 장소 확정되면 물리적 대응”

3일만에 공식 입장

북한은 11일 한미 양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결정한 것에 대해 물리적 대응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위협했다. 사드 배치 결정 발표 후 사흘 만에 나온 첫 공식 반응이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교’를 통해 “세계 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 수단인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 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포병국은 ‘위임’에 따라 미국과 남한에 엄숙히 경고하면서 “남조선 괴뢰들은 미국 상전의 ‘사드’ 체계를 끌어들이는 것

으로 하여 우리의 무자비한 불벼락을 스스로 자초하는 자멸의 비참한 말로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군대는 적들의 모든 침략전쟁 수단들은 물론 대조선 공격 및 병참보급 기지들까지 정밀준조 타격권 안에 잡아넣을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또 “당장이라도 명령만 내리면 가차 없이 무차별적인 보복타격을 가하여 불바다, 잿더미로 만들어놓으려는 것이 우리 군대의 드팀없는 의지”라고 위협했다.

포병국은 “우리 혁명무력은 앞으로도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수호의 전초선에서 그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형포한 미국과 그 하수인들의 침략적인 전쟁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과감한 군사적 조치들을 연속 취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